



주간 통일정세

2012-4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캄보디아 시아누크 사망에 조전(10/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병 치료 중 숨진 노로돔 시아누크 전 캄보디아 국왕의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시아누크 전 국왕의 아들 노로돔 시아모니 캄보디아 국왕에게 보낸 조전에서 시아누크 전 국왕이 캄보디아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비동맹운동(NAM) 발전에 큰 업적을 쌓았다고 전함.
 - 또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시아누크 대왕 폐하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결한 의리관계를 맺었고 이는 조선과 캄보디아 두 나라 인민 사이의 친선과 연대성, 협조관계의 영원한 초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 전자공업상 김재성으로 교체(10/15, 연합뉴스)**
 - 북한 내각의 전자공업상에 김재성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장이 새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개교 65주년을 기념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낸 서한을 찬양하는 전자공업상 김재성 명의의 글을 실었으며, 이 글은 "전자공업성이 지닌 임무는 매우 무겁다.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힘.
- **北 김경희, 싱가포르서 김정남 접촉 가능성(10/16, 아사히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후견인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가 싱가포르에서 김 제1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함.
 - 이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남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비서가 최근 싱가포르를 방문했으며 김정남과 극비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함.
- **北 체육상, 리종무 축구협회위원장으로 교체(10/1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내각 체육상을 박명철에서 리종무로 교체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밝힘.



- 이 방송은 이날 평양 통일거리운동센터 준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체육상을 리종무로 소개했으며, 리종무의 전임자인 박명철 전 체육상은 지난 12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제12차 인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연설을 한 뒤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음.

● **北, 새 시대정신으로 띄운 '생눈길 정신'(10/21,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6일 '생눈길을 헤치는 정신으로 창조하며 승리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1면에 실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신문은 사설에서 "생눈길을 헤치는 정신 이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새로운 역사적 시기의 시대정신이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과감히 돌진해나가는 낙관적이며 창조적인 공격정신"이라고 소개
- 신문은 김일성 주석 시대 '백두혁명 정신', '천리마 정신'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 '속도전의 혁명정신', '고난의 행군 정신' 등을 잇달아 거론하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한다는 각오로 "생눈길을 헤쳐나갈 데 대해 엄숙히 선언했다"고 전함.

■ **김정은동향**

-10/19, 김정은 黨 제1비서, 10.19 北送 비전향장기수 김동기에게 80회 '생일상'전달(10.19,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10.13), 김일성 父子 동상과 창전거리 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라영각·강성일 등에게 '노력영웅칭호' 수여(10.17,중통)
 - 상임위 정령(10.9), 낙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外 12개 단위에 '2중 26호모범기대영예상' 등 수여(10.17,중방)
- 최영림(내각 총리), 황해북도 은파탄광 등 여러 부문사업 현지 요해(10.20,중통)
 - 은파탄광과 사리원지질대학 및 황주군의 여러 농장들 돌아보고 지역적 특성에 맞게 영농방법의 확립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강구
 - 농업과학원 시험포전을 찾아 농업기계화연구소, 평양기계대학, 함흥·해주·곽산연결농기계공장,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새로 제작 및 개조한 농기계들의 기술적 특성과 작업성능 요해



나. 경제

- **北 주민 생활수준 나아진 것 없어(10/15, 뉴욕타임스(NYT))**
 -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일반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개선된 것이 없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인용, 15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신문은 북한과 중국과의 접경도시인 단둥에서 북한 주민 4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평양에는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와 벤츠 승용차가 크게 늘어나는 등 상류층의 삶은 더 화려해졌지만 이들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이 부족해 고초를 겪고 있다고 전함.

다. 사회·문화

- **北 평양에 통일거리운동센터 준공(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에 통일거리운동센터가 완공돼 준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통일거리운동센터는 우리의 스포츠센터와 비슷한 곳으로, 수백 개의 체육기구와 건강회복시설, 수영장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신은 "센터에는 근로자들의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각종 운동기재와 치료설비들이 가득히 갖춰져 있다"고 묘사하고 최룡해 총정치국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등이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전함.
- **北서 10년간 7만7천명 재해 사망(10/17, 미국의 소리(VOA))**
 - 지난 10년간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사망한 주민이 7만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국제적십자자연맹(IFRC)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IFRC가 16일 낸 '2012 세계재해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서 7만7천747명이 재해로 사망했고 이재민은 974만1천515명이었음.
 - 또한, 보고서는 먹을 것을 구하려고 떠돌아다니는 북한 어린이를 지칭하는 '꽃제비' 가운데 중국에 나와있는 수가 1998~1999년 수만 명에서 현재는 1천명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北전역 유원지 건설붐... "인민행복 위한 조치" 선전(10/17, 조선중앙방송)**
 - 김정은 체제 들어 평양시를 비롯한 북한 전역에서 공원과 유원지를 건설·개보수하는 붐이 일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함.
 - 이 방송은 17일 "전국 각지에서 문화휴식터를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며 북한 전역의 공원 건설붐을 소개함.
- **지난해 북한 결핵 사망률 감소(10/18,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북한에서 결핵 사망률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를 인용해 전함.

- WHO는 전날 발표한 '2012 세계 결핵통제' 보고서에서 2011년 북한에서 결핵 사망자수는 10만 명당 6.4명으로 그 전해(7.7명)보다 줄었다고 밝힘.
- 지난해 북한의 결핵 발병자는 인구 10만 명당 345명으로 그 전해와 같았는데, 북한의 결핵 발병률은 아시아에서 동티모르와 캄보디아, 미얀마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며 지난해 북한의 전체 결핵환자 수는 9만 1천433명이며 이 중 3만1천279명은 전염성 결핵환자로 나타났음.

● 北, 10월 하순 과학행사 풍성(10/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월 하순 과학기술 관련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고 20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처장의 말을 인용해 전함.
- 18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제23차 전국 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개막됐으며 23일과 24일에는 평안남도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에서 전국 석탄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열릴 예정임.
- 23일부터 26일 사이에는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평양종합인쇄공장 등에서는 주물부문, 인쇄부문, 기계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와 현상공모 등이 열리고 24일부터 26일까지 김일성대학에서는 기초과학토론회가 진행될 계획임. 30일과 31일에는 평양시 평천구역 연료사업소에서 땀감부문 과학기술현상공모가, 김책공업대학에서는 전자공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와 금속 및 공구재료 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열림.

● 北, 부르주아 문화 경계... "제국주의 바람은 마약"(10/18,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서구 자본주의 문화가 청년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힘.
- 이 신문은 이날 '자본주의 사상 문화와 청년 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부르주아(부르주아) 사상문화와 날라리풍이 절대로 침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들 속에서 고상한 도덕품성과 건전한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즐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집요하게 불어넣는 '향기로운 바람'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썩어빠진 부르주아 자유화 바람에 물젖으면 정신도덕적으로 타락변질되게 된다"고 지적했고, "극도로 안일해이하고 색정적이며 변태적인 부르주아 생활풍조는 청년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이 개인의 이익과 돈 밖에 모르는 속물로 굴러떨어지게 하며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中 훈춘-北 원정리 新두만강대교 내년 초 착공(10/15, 연변일보)**
 - 중국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가는 관문인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훈춘(琿春)과 북한 원정리를 연결하는 새 교량(일명 신두만강대교)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라고 중국 연변일보가 15일 보도함.
 - 신문은 훈춘시 교통운수국을 인용해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와 원정리를 잇는 새 교량 건설을 위한 설계탐측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함.

- **中, 유엔 통한 北 식량지원에 100만 달러 기부(10/16, 미국의소리(VOA))**
 - 중국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사업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6일 WFP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WFP는 중국이 기부한 자금으로 1천550t의 옥수수를 사들여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강된 영양강화 식품으로 가공해서 40만 명의 북한 여성과 어린이에게 한 달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WFP는 올해 7월부터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영양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 82개 군에서 239만 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1년간 북한에 12만3천t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함.

- **北 국적자 모잠비크서 상아 밀반출 적발(10/16, 자유아시아방송(RFA))**
 - 아프리카 동남부의 모잠비크에서 북한인이 코끼리 상아 130점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이 방송은 모잠비크 AIM 통신을 인용해 "북한 국적자인 김 모씨가 상아 3kg(3만6천달러 상당)을 비닐봉지 여러 개에 나눠 담아 밀반출하려다 모잠비크 마푸토 국제공항에서 지난 11일 세관에 적발됐다"고 전함.
 - 김 씨는 적발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13만3천300달러 상당의 화폐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美구호단체, 北에 700만 달러 의약품 추가 지원(10/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비영리구호단체 아메리케어스(AmeriCares)가 북한 수해지역에 700만 달러(약 7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함.
 -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현장 조사단이 지난달 북한 홍수 피해 지역을 돌아보고 나서 북한 수재민 17만5천 명에 대한 이번 의약품 추가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아메리케어스는 앞서 7월에도 북한



수재민 1만5천 명을 위한 기초 의약품을 지원했고 지난달 추가지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힘.

- **조선총련, 산하 단체에 김일성 초상화 교체 지시(10/17, 도쿄신문)**
 - 북한에 이어 일본 내 친북 단체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새로 제작한 이른바 '태양상'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함.
 - 이 신문에 따르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는 최근 산하 단체와 조선학교 등에 이달 안에 사무실 벽에 거는 초상화를 바꾸라고 지시했으며, 앞서 북한도 각종 훈장이나 메달, 휘장 등에 사용되는 초상화를 일제히 교체했다고 전함.
- **北, 런던올림픽 중계권 제공 ABU에 감사편지(10/17, KBS)**
 - 북한 중앙방송위원회(KRT)가 2012런던올림픽 중계권을 제공한 아시아 태평양방송연맹(ABU·회장 김인규 KBS 사장)측에 공식적으로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KBS가 17일 밝힘.
 - 자바드 모타기 ABU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63빌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BU서울총회에서 북한 KRT가 런던올림픽 중계권 제공과 관련해 ABU에 공식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고 전함.
- **北, 中 이어 대만 관광객 유치 공들여(10/17, 연합뉴스)**
 -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중국에 이어 대만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함.
 - 17일 대만 관광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해외 관광선전 활동을 총괄하는 조선국제여행사 조성규(趙成奎) 사장이 지난 11일부터 3박4일간 비공개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 주요 여행사 관계자 등과 만나 북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中 대사관원들, 북녘 들판서 가을걷이 도와(10/18, 신화통신)**
 -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를 비롯한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 17일 북녘 들판에서 가을걷이에 동참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8일 보도함.
 - 통신은 깊어가는 가을 들녘에서 중국 대사관원들이 북한 농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벼를 수확한 뒤 다과회를 갖고 정담도 나눴다고 분위기를 전했으며, 가을걷이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평양 근교로 추정된다고 밝힘.
- **北日, 일본인 성묘용 방북 직항전세기 운항추진(10/18, 도쿄신문)**
 -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유족의 방북 성묘를 명분으로 직항 전세기 운항을 논의 중이라고 도쿄신문이 18일 보도함.
 - 북한이 직항 전세기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일본 유족단체에 전달했고, 일본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北, 시아누크 前캄보디아 국왕 애도일 선포(10/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사망한 노로돔 시아누크 전 캄보디아 국왕을 추모해 이달 23일을 애도일로 정하고 이날 지정된 장소에 조기를 달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이 통신은 북한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결정에서 "두 나라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발전과 빨럭불가담(비동맹) 운동, 세계자주화 위업 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한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이며 저명한 국제정치활동가 시아누크 대왕 폐하의 서거에 즈음해 10월 23일을 애도일로 했다"고 밝힘.

- **北, 유엔안보리에 '美위협' 심의요청(10/18, 러시아의 소리 방송)**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리아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18일 보도함.
 - 이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자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함.
 - 또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이동일 차석대사는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미국의 반 북한 정책에 대한 대비책이며,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힘.

- **스웨덴, 올해 620만 달러 대북지원...보건의료 중점(10/19, 자유아시아방송(RFA))**
 - 스웨덴 정부가 올해 620만 달러의 예산으로 보건·의료 지원 등 대북 지원에 나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은 올해 개별국가로는 최대규모인 4천100만 크로나(약 627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더스 맥슨 SIDA 대변인은 "스웨덴 정부는 2000년대 후반까지 대북 식량지원에 주력하다 최근에는 보건·의료 부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힘.

- **北, 대만에 아리랑 공연기간 직항편 제안(10/19,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매스게임 예술표현인 '아리랑 공연' 기간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직항 전세기를 운항하는 방안을 대만에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북한의 해외 관광선전을 총괄하는 조선국제여행사 조성규(趙成奎) 사장은 최근 타이베이에서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힘.

- **필리핀인 北관광 내년 2월 시작(10/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내년 2월부터 필리핀인의 북한 관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관광·여행 전문 주간지 'TTG아시아'를 인용해 19일 보도함.



- TTG아시아는 필리핀의 호화관광 전문여행사인 '셀리브레이트 라이프'가 지난 6월부터 필리핀인의 북한 관광을 위해 북측과 협의 중이며 내년 2월 말이나 3월께 필리핀 관광객의 첫 북한 방문이 성사될 예정이라고 전함.
 - 이 여행사 관계자는 "일부 부유한 중국계 필리핀인들이 북한 관광을 원한다"며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한 관광객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면 북한이 관광용 비자를 즉시 발급해주는 방식을 협의 중"이라고 밝힘.
- **中, 北에 공항터미널 건설 노하우 전수(10/20, 연합뉴스)**
- 중국이 공항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북한에 전수하고 나섰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함.
 - 20일 중국민용항공 동북지구관리국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북한 민항중국 안재원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 6명은 지난 18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타오셴(桃仙)국제공항 방문함.
 - 민항중국 관계자와 백두산건축설계원의 설계사 등으로 구성된 북측 대표단은 현재 제3터미널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타오셴공항을 시찰하고 중국측 전문가들로부터 터미널 내장재와 석재 가격을 비롯해 지붕 두께, 지하 방수처리, 제조업체 납품과정 등 터미널 건설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들음.
- **北노동당, 이란 이슬람연합당과 교류(10/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가 하미드 레자 타라기 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이란 이슬람연합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전함.
 -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란 이슬람연합당을 위해 연회를 마련했으며 북측에서는 김영일 비서 등이, 이란 측에서는 타라기 부대표와 알리 레자 가니마트푸르 북한 주재 이란 임시대리 대사 등이 참석함.
- **中 "남·북한 자제해야"(10/20,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남북) 당사국들이 도발적이고 급진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한반도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사태는 대화와 협의로 풀어야 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고 강조함.



- **北, 유엔 연설서 유엔사 해체 촉구(10/17, 조선중앙통신)**

 -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북한 대표가 주한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를 조속히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이 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법률위원회) 회의에서 '유엔현장 및 기구 역할 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안건으로 토의할 때 연설을 통해 "남조선 주둔 유엔사는 개별 국가에 의한 유엔 도용의 전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밝힘.
 - 또한, 그는 "개별 국가에 의해 유엔이 도용된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유엔현장 및 기구 역할 강화의 선행공정으로 된다"며 "유엔사를 해체하지 않는다면 유엔은 미국에 의해 자기의 이름이 도용당한 수치를 털어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함.

- **北 "빠라살포' 임진각에 군사적 타격" 위협(종합)(10/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9일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날릴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임진각과 그 주변에서 사소한 빠라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서부전선의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이 통신은 북한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가 이날 '공개통고장'을 통해 "빠라살포지점은 그대로 둘 수 없는 도발원점이며 우리가 그 즉시 청산 해버려야 할 물리적 타격 목표"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함.
 - 서부전선사령부는 이어 "지금 이 시각부터 괴뢰들의 빠라살포지점으로 공개된 파주시 임진각과 그 주변은 우리 군대의 직접적인 조준격파사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빠라살포는 가장 노골적인 심리전이며 그것은 곧 정전협정에 대한 파기행위이고 우리에게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전쟁도발"이라고 비난함.

- **北국방위 "서해엔 우리가 설정한 분계선만 존재"(종합)(10/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8일 연평도 방문을 비난하며 "조국이 통일되는 날까지 조선 서해에는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정책국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에 대해 "대결과 충돌의 최근인 북방한계선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가로막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해보려는 어리석은 기도(시도)의 발로"라고 비난함.
 - 이어 "현시기 북방한계선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그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가 아니면 대결과 전쟁을 바라는가를 가르는 척도"라며 "이명박 역도는 괴뢰 군부호전광들을 북방한계선 고수로 내몰아 동족대결을 극대화하고 나아가서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트려 보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개성공단 일방과세.. 퇴직금 요구도(종합2보)(10/18,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마련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퇴직금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함.
 - 정부 당국자는 18일 "북측이 지난 8월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에 실제 기업 소득세, 영업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힘.

- **北, 개성공단 8개사에 총16만弗 과세 일방적 통보(10/19, 연합뉴스)**
 -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8개사가 북측으로부터 총 16만 달러의 일방적 과세 통보를 받은 것으로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관련 당국과 입주기업에 따르면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북측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 통보를 받은 곳은 8개사, 과세 총액은 16만달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고 함.

■ 기타 (대남)

- 우리 「합참」 의장의 對北언급(10.8, 북의 핵사용 임박징후 포착되면 즉시 선제타격 가능 등)을 "북침전쟁도발 광증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우리(北)는 호전광무리에게 강력한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10.16, 중통·노동신문·평방/호전광의 단말마적인 전쟁광증)
- 【조평통 대변인 담화】 국방부가 '종북실체 표준교안' 교재를 軍에 하달한 것 관련,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극악한 탄압음모'라며 '연북통일기운이 군부 내부까지 파급되는 것을 막고 대선을 통해 보수정권을 연장시켜보기 위한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비난(10.18, 중통·중방)
- 「北 서부전선사령부 공개통고장(10.19)」, 南 탈북자단체의 對北 전단지 살포계획(10.22, 임진각 주변) 발표에 대해 "빠라살포 움직임 포착 즉시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 위협(10.19, 중통·중·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北 6자회담 합의파기는 큰 실수될 것"(10/16, 연합뉴스)

-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를 골자로 하는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파기할 경우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6일 경고함.
-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데이비스 대표는 한·미·일 대북정책 실무 협의 참석차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9·19 공동성명 파기 가능성을 미측에 시사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이같이 말함.
- 지난 8월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7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국과 북한간 비공식 접촉에서 북측 인사가 비핵화 관련 과거 합의를 재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함.
- 북한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핵 개발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복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데이비스 대표는 이어 영토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북한에 대한 한·미·일 세 나라의 대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뒤 세 나라의 정책 공조가 "매우 강하고, 매우 좋다"고 강조함.

나. 미·북 관계

● "北, 유엔안보리에 '美위협' 심의요청"(10/18, 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리아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18일 보도함. 이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자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함.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이동일 차석대사는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미국의 반복한 정책에 대한 대비책이며,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北, 美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 파기 시사"(10/21,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미국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파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이 21일 보도함.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미국국 부국장은 지난달 말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미국의 클리퍼드 하트 국무부 대북 특사와 만났을 때 "핵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고 말함.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등을 담은 2005년 6월의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는 것임.

- 북한 외무성은 7월20일 성명에서도 "제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핵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음. 8월31일에는 "우리의 강경 입장을 무슨 전술로 보는 것은 오산"이라며 "미국이 끝내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위협함.
- 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올여름에도 미국의 전직 정부 고관에게 비슷한 견해를 전달함. 북한의 잇따른 발언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섭 전술일 가능성이 크지만 6자회담 한 참가국 관계자는 "커다란 정책 변경 조짐인지도 모른다."고 말함.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 정책특별 대표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약속에서 이탈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고 신문은 전함.

다. 중·북 관계

● 中, 유엔 통한 北 식량지원에 100만 달러 기부(10/16, 연합뉴스)

- 중국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사업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6일 WFP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WFP는 중국이 기부한 자금으로 1천550t의 옥수수를 사들여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강된 영양 강화 식품으로 가공해서 40만 명의 북한 여성과 어린이에게 한 달간 제공할 예정임. WFP는 올해 7월부터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영양 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 82개 군에서 239만 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1년간 북한에 12만3천t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임.
- 이 기구의 올해 대북 지원 사업에는 러시아, 스위스, 브라질,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참여했으며 지금까지 모금된 자금은 5천800만 달러로 내년 6월까지 필요한 1억5천만 달러의 38.7%임. WFP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겨울 동안 여성과 어린이에게 영양지원을 하려면 3만t의 옥수수와 4천t의 식용유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힘.

● <中, 北인력 도입 확대 추진...황금평에 영향은>(10/17, 연합뉴스)

- 북·중 접경도시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가 북한 인력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나서 인근의 황금평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지난해 6월 착공식을 한 뒤 개발이 지지부진한 황금평 경제특구의 중요한 투자 이점 가운데 하나가 북한 인력을 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임.
- 중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생산성이 높은 북한 인력을 선호하지만 중국 현지에서 북한 근로자를 도입하려면 업종 제한이 있는 데다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수요에 비해 실제 도입되는 인력은 크게 부



- 족한 상황임. 이 때문에 북·중이 단둥-신의주 접경지역에 공동으로 개발하는 황금평 경제특구에 입주하면 개성공단처럼 양질의 북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국 기업들이 꼽는 황금평 특구의 매력임.
- 그러나 현재 80% 이상이 농경지인 황금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막대한 투자비와 시간이 필요한 탓에 단기간에 경제특구가 완성돼 기업 입주가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런 상황에서 황금평과 맞닿은 중국 단둥시가 북한과 노무 합작 사업을 강화하기로 해 관심을 끄. 양측은 지난 15일 단둥에서 노무합작교류회를 열고 인력 수요와 인력지원 상황, 직업 훈련 등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인력 파견 교섭·관리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함.
 - 단둥시는 황금평과 붙어 있는 압록강 유역 랑터우(浪頭)에 첨단산업단지가 포함된 신도시를 조성 중이어서 중국 정부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 대규모 북한 인력 도입을 승인할 경우 유력한 후보지로 꼽힘. 단둥시 상무부시장은 노무합작교류회 행사에 참석, "정부로부터 단둥에 대한 특수노무정책을 적극적으로 얻어내 대북 노무합작에서 중국 최고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함.
 - 현지에서는 황금평에 앞서 단둥에 대규모 북한 인력이 도입되면 중국 측 입장에서선 황금평 개발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약해져 개발 시점이 더욱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노후한 동북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개조하려는 '동북진흥책'의 하나로 랑오닝연해경제벨트 건설을 추진 중인 중국은 황금평과 맞닿은 단둥 랑터우 신도시를 압록강 유역의 최대 물류·가공단지로 육성할 계획임.
 - 일각에서는 올해 들어 경제난이 심화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당장 외화벌이가 가능한 노무 인력 송출에 적극적으로 매달린다는 분석도 나옴. 단둥의 한 소식통은 17일 "중국은 그동안 북한 영토인 황금평 공동 개발보다 먼저 시작됐고 자국 영토인 단둥 신도시 개발에 우선순위를 뒀다"면서 "기업들 입장에서선 상대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적은 중국 지역에서 북한 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황금평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가 더 약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함.

라. 일·북 관계

● "피랍 일본인 송환운동으로 北日관계 난관"(10/15, 연합뉴스)

- 프랑스의 리베라시옹 신문은 15일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일본인 소가 히토미 씨의 납북 일본인 석방 청원운동으로 북일(北日)관계가 난관에 빠졌다고 보도함.
- 리베라시옹은 이날 교토발 분석 기사를 통해 소가 씨는 1978년 사도 섬에서 북한 공무원들에 의해 어머니와 함께 납치된 뒤 월북 미군 찰스 젠킨스와 결혼해 두 딸을 낳아 기르던 중 2002년 다른 납북 일본인 4명과 함께 귀국했다며 소가 씨가 일본 귀환 10주년을 며칠 앞두고 납북 일본인 석방 청원운동을 시작했다고 전함. 신문은 소가 씨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북한 정권이 아직도 억류하고 있는 모든 피랍 일본인들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 청원운동은 과거 냉전시대의 유산인 남북 일본인 문제가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분석함.

- 리베라시옹은 일본 정부가 17명의 피랍 일본인을 확인했고 이 중 12명은 아직도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 가운데 8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북한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전함.
- 신문은 일본이 한국과 달리 이 문제를 원칙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모든 협상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며 북한은 2005년부터 계속되는 일본의 정정불안을 이유로 피랍 일본인에 대한 조사 착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임.

마. 기 타

● 이명박 대통령 "NLL 목숨 걸고 지켜야"(10/8, 미국의소리)

-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서해 서북단의 연평도 군 부대를 전격 방문함. 이 대통령은 관측 초소에서 북한 측 초소와 북쪽 해상을 살펴본 뒤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함.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통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 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고 연설함. 더불어 이 대통령은 NLL을 지키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함.
-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임. 청와대는 지난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2주기를 앞두고 군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NLL 사수 의지를 천명한 것임. 이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강하게 반격해야 한다며, 무기를 강화하는 것이 반격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준비를 하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함.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회고하면서 당시 여건이 미비했지만 할 수 있는 반격을 제대로 했으며, 해병 용사들의 전투정신이 아주 뛰어났다고 밝힘.
- 이와 함께 북한의 개혁을 촉구하기도 함. 이 대통령은 북한이 농지개혁을 하고 경작제도를 바꾸면 식량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함. 이와 함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의 북한 내부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위장전술이고 그럴 때 일수록 경계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고 말함.

● <北, 대남공세 강화...'NLL주장·임진각 위협'까지>(10/21, 연합뉴스)

- 북한이 18대 대선이 목전에 다가올수록 대남(對南) 공세를 강화하는 양



상임.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지 살포 계획에 즉각적인 '군사적 타격'을 위협하고 대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정수장학회 문제를 적극 언급하고 나섬.

-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연평도 방문을 비난하고 "조선 서해에는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같은 날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도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와의 협의도 없이 미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은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정전협정에 전면 배치되는 유령선"이라고 '지원사격'을 함. 북한은 지난 달 29일 국방위원회 정책국을 통해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주로 각종 매체를 활용해 이런 주장을 해오다가 20여 일만에 국가기관을 다시 내세운 것임.
- 지난 19일에는 북한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가 '공개통고장'에서 남한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임진각과 그 주변에서 사소한 뼈라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서부전선의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함. 북한이 NLL과 전단지 살포 문제에 발끈한 것은 기본적으로 남한 정부의 움직임에 맞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연평도를 전격 방문해 NLL 사수를 강조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백배, 천배 보복한다는 정신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함. 북한은 그동안 남한의 군(軍) 최고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전방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응으로 보임.
- 또 NLL 문제 등 남한의 대선 이슈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생각해볼 수 있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정권교체에 유리한 정세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임.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연평도에 대한 이명박 역도의 이번 불시행 각은 집권 5년 기간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대북정책의 당위성을 보여준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기도 함.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역도가 모략과 총칼로 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최근 남한 대선의 이슈에 대해 적극 비난 공세를 펴.
- 나아가 북한이 경제난 지속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부결속을 위해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를 높일 개연성도 있음.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주민의 충성과 희생을 강조하는 '생는 길 정신'을 내세우고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막아야 한다고 체제 단속에 부쩍 신경 쓰고 있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의 중부전선에서 "북한이 내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도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23일 군사위원회 개최..합참의장 방미 안해(10/18,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23일 워싱턴 D.C에서 제36차 군사위원회회의(MCM)를 개최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등 다양한 동맹현안을 협의한다고 합참모본부가 18일 밝혔다.
 - 양국 합참의장이 이번 회의를 공동 주관하지만 정승조 합참의장은 서울에 남아 화상회의시스템(VCT)을 통해 회의에 참석함. 합참의장이 공식적으로 열리는 MCM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그러나 원태호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박찬주 신연합방위추진단장 등 합참 일부 장성들은 워싱턴 D.C 회의에 직접 참석할 계획임.
 - 합참 관계자는 "정 의장은 한국에서 VCT로 회의에 참석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면서 "최근 북한군 귀순 상황과 관련해 육·해·공군의 전 방위 경계 태세를 확립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아·태지역과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 확립을 재확인할 예정임. 회의 결과는 양국 합참의장의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나. 한·중 관계

- **외교부, 中선원 사망사건 철저히 조사해 책임 규명하길(10/18, 인민일보)**
 - 2012년 10월 17일,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연례브리핑을 가짐. 16일, 한국 해경은 중국 어선에 대한 조업 단속과정에서 고무탄을 발사해 중국 선원 한 명이 이에 맞고 사망함.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홍대변인은 "10월 16일, 한국 해경 측은 중국 어선 두 척에 대한 조업 단속과정에서 중국 선원에 고무탄을 발사해 사망케 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외교부는 사태 변화를 매우 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영사사(司, 처에 해당)와 주한 중국대사관 및 광주 주재 중국영사관 관련 책임자들은 한국 측에 각각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고, 한국 측의 폭력적인 단속으로 인한 중국 어민 사망사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한 한국 측에 공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기 요구했으며, 한국 측이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폭력적 단속을 근절하고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중국 선원의 신변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길 촉구했다."라고 답변함. 그는 또한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속적으로 본 사건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고 덧붙임.
 - 최근 중한 양국 간 어업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민중들은 한국 측의 폭력적 단속을 비난하고 있고, 또 한국 측은 먼저 중국 어민들의 불법 조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입장을 묻



는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은 "중국정부는 줄곧 관심과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중국 어민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했고, 어민들에게 합법적인 조업을 당부했다. 중국은 한국 측이 실질적인 조치로 폭력적 단속을 근절하고 아울러 중국 어민의 신변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중, '선원사망' 불구 관계악화 방지 공감(10/19,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이 19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고위급 회동을 갖고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 중 벌어진 중국인 선원 사망 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함.
- 장신선(張愐<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오전 외교부를 방문, 안호영 제1차관과 약 1시간가량 만나 중국 측의 입장을 전달함. 장 대사는 이날 우리 측에 총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이 문제가 한중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조하고 공정·타당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함.
- 장 대사는 인도주의에 기초해 유가족들이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협조도 우리 측에 당부함. 소식통은 장 대사가 이날 '항의'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함. 장 대사는 사고 다음날인 17일 외교부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해경 조사 결과를 주시해 왔음. 안호영 차관은 이날 면담에서 "양국이 이 문제를 국내·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안 차관은 불법조업을 포함한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중국에 제안함.
-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이번중국인 선원 사망 사고와 관련, "한중 양국이 불법조업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함. 김 장관은 "다만 이 문제는 우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있었고,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아주 극렬한 저항이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우선 이해하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함. 김 장관은 "정부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할 것이며 이에 기반을 두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면서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힘.
- 우리 정부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차분하고 냉철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한중간 긴장이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음. 중국 역시 사건 직후에는 항의와 불만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지만 개별 사건이 양국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강조하는 모습으로 선화하고 있음.

● **中, 李대통령 연평도 방문에 부정적 반응(10/19,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서해 서북단 연평



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음.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9일 "우리는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유리한 일을 하기 바란다."고 밝힘.

- 홍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각 측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 같이 답함. 중국이 이 같은 반응을 내놓은 것은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정세가 한층 격화될 수 있다는 정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됨.

다. 한·일 관계

● 정부 "日각료 야스쿠니참배 무책임행위..극히 유감"(10/18, 연합뉴스)

- 정부는 일본의 현직 각료 2명과 국회의원 다수가 18일 한꺼번에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함.
-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직 각료를 포함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 피해를 입은 이웃국가 국민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로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조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함.
- 하타 유키치로(羽田雄一郎) 국토교통상과 시모지 미키오(下地幹郎) 우정민영화 담당상 등 일본 현직 각료 2명과 민주당, 자민당, 다함께당, 국민신당 등 여야 의원 67명은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함. 차기 총리 가능성이 큰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도 전날 오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등 일본 정치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상화되는 분위기여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낳고 있음.
- 외교부는 전날 아베 총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직후에도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비판한 바 있음.

라. 미·중 관계

● 中 "美에 닌오위다오 관련 엄정한 입장 밝혀"(10/18,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8일 닌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엄정한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함. 홍 대변인은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6~17일 방중 기간에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부장과 회담하고서 양제츠 외교부장과의 만났다고 확인하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회담에서 중국 측은 중미 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유지하는 게 서로의 이익에 맞기 때문에 상호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대방의 핵심 이익과 우려를 존중하면서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힘. 그는 또 "미국 측도 미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상호 존중과 호혜 공영의 협력관계 발전을 희망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소개함.

- 중국 측은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미 의회가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 일본의 영유권(sovcreignty)이 아닌 행정적인 권리인 시정권(施政權: administration)만 인정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점을 강조하면서 중립 약속 준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짐.

마. 미·일 관계

● <日, 미군병사 오키나와 여성 성폭행에 '발각'>(10/17, 연합뉴스)

- 오키나와(沖縄)에서 미 해군 수병 2명이 일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발각 뒤집힘. 오키나와현 경찰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군 수병 2명이 지난 16일 새벽 귀갓길의 성인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집단강간치상혐의)로 긴급 체포함. 이들 미군은 술에 취해 일을 끝내고 귀가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했으며, 여성의 목을 조른 흔적도 드러남.
-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일본 정부가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7일 오전 관저 출입 기자단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함.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은 "(미군 병사의 범죄는) 악질적이고 비열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아주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불만을 터뜨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16일 밤 방문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엄정한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라는 말로 정리될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미국을 압박함.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현 지사는 17일 오전 모리모토 방위상을 만나 미국 측에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주일 미 대사관을 방문해 존 루스 대사에게 "오키나와 현민은 미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항의함.
- 일본 정부는 미국에 철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로 함. 하지만, 사고가 빈발하는 신형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의 오키나와 배치 강행으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이어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분노를 가리앉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미국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루스 대사는 "미국 정부가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에 전면 협조하겠다고 약속함. 루스 대사는 기자들에게 "오키나와 현민의 분노를 이해한다. 일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임. 오키나와에서는 1995년 발생한 미군 병사의 12세 소녀 성폭행 사건 당시 미군이 범인의 신병 인도를 거부해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이후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이전 요구가 본격화됨.
-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오키나와 내 이전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미국과 일본은 2010년 5월 소음과 사고 우려에 대한 주민 불만을 줄이기 위



해 후텐마를 같은 오키나와 내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현 외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반발에 직면해 이전 작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음.

- 나카이마 지사는 이날 사이토 쓰요시(齋藤 勲) 관방 부장관과 회동에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와 관련 "(정부는) 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기지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함. 그는 "미군이 동맹국의 군대인지 묻고 싶다"면서 "미군 병사가 법률을 지키려는 생각은 있는 것이냐"고 비판함.
- 주민과 시민단체도 격앙함. 일부 시민단체는 일본 내 모든 미군 기지를 즉시 폐쇄하라고 요구함. 주민들은 "하늘에는 신형수송기 오스프리가 날고, 땅에는 걸어 다니는 흥기(미군 병사)가 있다"면서 "현민은 어디로 걸어 다녀야 하느냐"고 분노를 쏟아냄.
- 1995년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미군의 여성 성폭행 또는 강도, 살인 등 강력 사건은 11건이며, 이 가운데 이번 사건을 포함해 6건이 오키나와에서 일어남.

● "美日, 도서탈환 합동훈련 취소"(10/20, 연합뉴스)

-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열도로 영토 분쟁을 겪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내달로 예정된 도서 탈환 합동훈련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지지통신이 19일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센카쿠 국유화 조치 이후 양측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훈련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 훈련을 취소할 예정임. 이는 노다 요시히코(野田 佳彦) 일본 총리 측 견해와 일치한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통신은 전함.
- 이와 관련해 방위성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음. 이에 앞서 일본 언론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11월 5~16일 주일 미군과 자위대가 참가하는 합동 훈련을 일본 남부의 규슈와 난세이(南西) 제도 등에서 실시한다고 보도함. 이 기간에 오키나와 부근 무인도인 이리스나 섬(入砂島)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센카쿠 등 일본의 도서 지역이 공격받을 때에 대비해 합동 상륙작전을 통한 섬 탈환 훈련도 예정됨.
- 동중국해상의 이리스나 섬은 센카쿠에서 수백 km 떨어져 있음. 당시 방위성은 양국 합동훈련이 센카쿠 국유화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특정 국가나 섬을 상징한 것은 아니라고 밝힘. 그러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훈련의 내용과 공개 범위를 최종 조율하는 것으로 당시 보도됨.
- 중국은 이와 관련해 최근 "지역 정세를 격화하는 건 지역 평화 발전과 번영의 조류(潮流)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감을 표시함.



바. 미·러 관계

● 여론조사 '러시아, 대미 감정 악화' (10/19, 미국의소리)

- 러시아인들은 지난 한해 미국에 대한 감정이 더 악화된 것으로 최근에 실시된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밝혀짐. 러시아의 비정부 연구기관 레바나 센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러시아인은 작년 67%에서 46%로 떨어짐.
-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은 27%에서 38%로 늘어남. 또 응답자의 약 3분의 2는 미국이 러시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함. 이 연구 기관은 지난 달 45개 지방 130개 도시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힘.
- 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려 노력했으나 두 나라는 시리아 사태, 이란 핵 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겪어왔음.

사. 중·일 관계

● 외교부, 일-미 합동군사훈련 실시에 대한 입장 밝혀(10/17, 인민일보)

- 2012년 10월 16일,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연례브리핑을 가진. 일본과 미국이 오키나와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섬 탈환' 가상작전도 포함된다는 보도에 대해 홍 대변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수호하는 것은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굳이 갑작스럽게 군사안보를 이유로 지역 긴장 국면을 가극화시키는 것은 이 지역 간 안보신뢰에도 이롭지 못하고 평화적 발전과 협력의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답변함.
- 대변인은 더불어 "중국은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대응 조치를 유보 중에 있다. 중국은 일본 측이 잘못을 반성하는 실질적 행동과 태도로 중일 다오위다오 협상이 진전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신사참배로 인해 중일 간 관계 악화될 수 있어(10/17, CNN)

- 일본 주요야당 총재이자 유력한 수상후보자인 아베신조는 수요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신사를 방문함으로써 일본과 중국 간의 긴장을 높임. 이번 방문은 동중국해의 외딴섬을 두고 두국가가 분쟁을 하는 도중 일어난. 사건의 전말은 이하와 같음. 최근 몇 주간, 중국해군은 이 섬 근처에 영향력을 뻗치며 군함을 보내는 등의 행보를 펼쳐옴.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수요일에 세척이 목격되었음.
- 14명의 A급 전범들과 수천의 일본군이 모여져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수상과 다른 정치적 인물들의 방문으로 인해 북한과 남한 그리고 중국의 반발을 사왔음. 작은 섬은 강력한 반일 감정을 일으켜 왔으며 이 신사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상징으로서 여겨져 왔음. 세 국가 모두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임.
- 이번 방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홍



레이는 수요일 일본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영통신인 신화통신이 보도함.

- **아베 신조 신사참배...中 "日, 역사문제 약속 지키길"(10/18, 인민일보)**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7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관한 문답에서 "일본은 '역사를 근거로 미래를 바라본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역사적 문제에 대한 진중한 태도와 약속을 지켜 관련 문제를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힘.
 - 홍 대변인은 야스쿠니 문제는 일본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하느냐에 대한 문제이자 중국을 포함한 피해 국가 국민들의 감정과도 연관된 문제라며, 본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백하다고 밝힘.
 -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17일 오후, 2차 대전 갑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모셔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함.

- **중국해군, 19일에 동중국해에서 연습...센카쿠를 의식(10/18, 요미우리신문)**
 - 중국 국영 신화사 통신은 18일, 중국 해군의 토키아 함대(사령부·절강성 영파)가 19일, 국가 해양국의 순시선이나 농업성 어업국의 어업 감시선등과 합동으로, 동중국해에서 연습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연간 계획에 근거한 것"이라며 표면상의 목적을 연습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군의 연습을 사전에 전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임. 동통신은, 연습의 목적을 "해상에서 합동으로 주권을 보호하는 능력을 높여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유효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오키나와현의 센카쿠 제도를 의식한 연습인 것은 명백함.

- **"中, 센카쿠에 무인기 투입 가능성"(10/21, 연합뉴스)**
 -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을 다투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무인기를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함.
 -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민간조사기관 리그넷(LIGNET)은 19일 발표한 '중국이 무인기로 분쟁 대상 섬(센카쿠 열도를 지칭)에 대한 주장을 강화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해군이 최근 무인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고 장래에 센카쿠 열도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지적함.
 - 중국 인민해방군은 다양한 디자인의 무인기를 개발해 배치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쉬벨사의 S100형 무인 헬기 18대도 사들임. 지난해 6월에는 중국 함대가 센카쿠 근해를 항해하다 헬기형 무인기 1대를 발진시킨 적도 있음. 리그넷은 같은 보고서에서 일본이 현행 헌법의 제약 때문에 무인기를 격추할 수 없다며 중국이 이 점을 노리고 무인기를 투입할 가



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아. 일·러 관계

● 러시아, 에토로후·쿠나시리 군기지 정비에 180억엔 투자(10/16, 요미우리신문)

- 인터 팩스 통신에 의하면, 러시아 하원 국방 위원회의 프란츠·크리트 비치 부위원장은 16일, 북방 영토의 에토로후섬과 구나시리에서 러시아 군의 기지를 정비하기 위해, 정부가 2014~15년에 71억 4000만 루블 (약 180억엔)의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함.
- 러시아 정부는 작년 말, 에토로후섬과 구나시리에 2114년까지 군의 기지를 한곳씩 추가적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했었음.

● 러시아, 韓-日 어업쿼터 박탈 경고(10/18, 뉴스1)

- 러시아 정부가 불법어업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의 어업쿼터를 박탈할 수 있다고 현지 영자신문 모스크바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수산청장의 발언을 인용, 보도함.
- 안드레이 크라이니 러시아 수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일본, 한국과 모든 협정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며 "일본과 한국이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쿼터를 전혀 배정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함.
- 크라이니 러시아 수산청장은 이어 일본이 지난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담에서 불법어획을 근절하겠다고 서명한 협정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함. 크라이니 수산청장은 일본이 불법 어획한 러시아 수역의 게를 계속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일본 항구가 러시아 수역 내 조업권이 없는 선박들의 불법 어획 게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게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서류와 함께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설명임. 그는 "매달 러시아에서 불법 어획한 게 300~600t이 일본과 한국으로 공급되고 있다"며 "일본 당국이 지난달 체결한 러시아-일본 불법어업금지협정이 발효되기 전이라도 이 분야의 질서를 확립하길 촉구한다."고 부연함. 그러면서 일본이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게를 항구에 하역하거나 한국에 수출하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일러 차관급 회의 열려 영토문제 숨고르기 (10/19, 요미우리신문)

- 북방 영토 문제 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일러 차관급 협의가 19일, 도내에서 행해져 사이키 아키라(외무·심의회관(정무 담당))와 러시아의 모르그로후 외무차관이 출석함.
- 사이키씨는, "일러 양국은 수뇌, 외상 레벨 등으로 가치가 있는 의견교환을 거듭해 왔다"라고 말해 향후의 교섭 진전에 연결하고 싶다는 생각



을 나타냄. 일본 정부는 이번 차관급 협의를, 12월을 목표로 하는 노다 수상 방로를 향한 준비라고 평가하고 있음.

- 차관급 협의에서는, 북한 정세나 오키나와현의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일중간의 대립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

자. 기 타

- **일·미·한 고관급 협의, 북한 정세로 의견교환(10/17, 요미우리신문)**
 - 북한 정세를 둘러싸고 일·미·한 3국의 고관급 협의가 17일 오전, 도쿄도내에서 행해짐.
 - 외무성의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협의의 서두에서 "북한의 현상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교환 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말함. 협의에는, 그린·데이비스 미 정부 특별 대표(북한 담당), 김성남 한국 외교 통상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이 출석함.
 -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 함. 일본 측은 8월에 북경에서 실시한 일·북 정부간협의의 예비 협의에 대해 설명함. 3국의 고관급 협의는 금년 5월에 서울에서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실시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